



촉촉히 젖은 교정의 봄 비가 내리면 그 해 농사가 잘 된다는 곡우(穀雨)인 20일 봄비가 내린 광주시 북구 동강대학교 교정에 철쭉이 만개해 봄의 정취가 물씬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연중 상설 전시

발전방안, 20개 실천과제 발표...새 CI도 공개

광주비엔날레를 국내 미술·문화산업의 랜드마크 및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행사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상설 전시 등을 통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관련기사 16면>

광주비엔날레재단(이사장 전운철·이하 재단) 박양우 대표이사는 20일 오후 광주비엔날레 제1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비엔날레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재단은 광주비엔날레의 비전을 '창의적 혁신과 공존의 글로벌 시각문화 매개체'로 설정하고, 4대 정책목표와 20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재단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지역작가 성장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대학(가칭), 200억 원 규모의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관 조성 등 20개의 실천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 지속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이날 창설 20년 만에 새롭게 개발한 CI(Corporate Identity·사진)를 공개했다. 이나미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교수가 개발을 맡은 새 CI는 비엔날레의 열린 시각으로 '세상의 규범을 해체하고, 틀을 깨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배추·양파 생산약정제 도입 가격 급등락 악순환 끊는다

농협, 지자체와 5개 농산물 생산 조절 가격 보장

매년 반복되는 배춧값 등 주요농산물의 급등락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 약정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전남이 주산지인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가을배추는 전남이 전국생산량의 85%, 양파는 51%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상욱 농업경제 대표이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를 확보해 주기 위해 정부와 함께 배추·양파·무·고추·마늘 등 5개 농산물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의 가을배추 생산량은 25만6000t으로 전국(30만3000t)의 84.5%를, 양파 생산량은 76만3000t으로 전국(159만t)의 50.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가을무는 6만6000t(14.8%), 고추 1만6000t(18.8%), 마늘 9만6000t(29.4%)이 전남에서 생산됐다.

생산약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농산물출하를 지지하면 해당농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농협은

사전에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면 재배면적도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농가에는 농산물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일정수준 가격(평년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준다. 이 기준은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농업인에 의해 공동 조정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배단체에서부터 재배면적 조정·작목전환 등 사전적인 수급대책이 추진된다. 가격이 급등하면 출하명령으로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수급안정용 물량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이 크게 안정될 것이라고 농협은 기대했다.

농협중앙회는 또 지역농협과의 상생을 위해 2016년까지 농협 마곡종합처리장(RPC)과 공판장 등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12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농협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54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직접 사업이 불가능했던 태양광발전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인삼 등을 재배하는 농민이나 농가가 검은 차단 천막 대신 태양광발전기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라고 농협은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멈춰버린 대한민국

성완종 리스트 파장...정국 혼란·국정 공백 장기화

대통령 해외순방 부재·'식물 총리' 기능 마비

국회 해임안 등 대치...경제활성화·연금개혁 표류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국정 공백과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대한민국 시계'가 멈출 위기에 빠졌다. <관련기사 3·4면>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통할해야 할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국민과 여야 정치권이 등을 돌리면서 정국현안이 유희물 위기에 직면했다. <관련기사 3면>

이는 박 대통령이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채 해외 순방길에 오르면서 예고됐다는 지적이다. 애초 박 대통령과 여권은 대통령 부재 중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총리의 거취 처리를 연기했는데 오히려 이 조치가 국정을 더욱 혼란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귀국 후 처리'라는 발언은 사실상 해임 의도로 해석됐고 더욱이 이후에도 이 총리에 대한 의혹이 더욱 확산하면서 이 총리가 제 구실을 하기 어렵게 됐다.

이 상황에서 여야가 이 총리의 거취를 놓고 대결하면서 국회 역할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 제출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새누리당은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0일 서울 관악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시기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에 공백이 생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성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부대표와 회동에서 오는 23일 본회의에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표결 본회의를 24일 추가로 잡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 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 요청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중 남은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크라우드 펀딩법 등 9개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여야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데다 이 총리 해임안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처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가까스로 활동기간을 연장(5월2일까지)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문회 증인체택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두 달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박상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놓고도 여야는 양보 없는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도 제자리걸음이다. 여야는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가동,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일안 마련에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평론가인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는 "박 대통령이 출국 전에 이 총리에 대한 거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국정운영이 어렵게 되고 있다"며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이 총리의 시급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창사 63주년

건강의섬오도

| 보고, 먹고, 체험하는 행복한 완도여행 |
 전복, 광어, 건어물, 특별 할인 판매전

2015 완도
건강보고 수산물 축제

2015. 5.1(금) ~ 5.9(토) 9일간

완도해변공원, 장보고 기념관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농업중앙회완도군지부